

2012. 05. Vol 216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

오 월

- 숲으로 가자

그림자마저 푸른 물이든
오월, 숲에 들면
양증맞은 은방울 꽃
짚랑짚랑 반겨주고
산까치 나긋나긋 몸짓
숲길 환히 열린다

하늘 가린 천장가득
아카시아 하얀 향낭
뼈꾸기 노래 따라
살뫂살뫂 흔들어
잊었던 옛날을 깨워
차르르 풀꽃피워낸다

벗이여 함께가자
달큰한 숲으로
오월 산 초록심장은
맑은 피 수혈해 주니
천형의 죄업마저도
말끔히 씻길 듯하이



나순옥

- 조선일보 신춘문예당선
- 충북시조, 진천문협회장역임
- 작품집[바람의 지문][석비에도 검버섯이]외

Contents

2012. 05. Vol 216



푹푹한 오월
당신 붉은 마음을 담은 꽃 카네이션
사랑과 존경을 가득 담아
가슴에 달아드리고 싶습니다.

- 4 충북도의회, 청주·청원 통합 적극 찬성 의견
- 7 댐 특별법 제정·지원사업 확대가 과제
- 8 도의회, 국립암센터 분원 건립 재추진 요구
- 11 청남대 개방 9주년 ... '봄꽃 향연'을 만나다
- 12 각 상임위원회 활동
- 18 주요 처리의안
- 20 5분 자유발언
- 22 도정질문
- 25 의정활동 이모저모
- 28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 30 의원논단
- 31 의정일기





충북도의회, 청주·청원통합 적극 찬성 의견

통합 결정 방법 - 청주시는 의회의결 청원군은 주민투표

“통합절차 신속한 이행 · 주민참여 확대 위해 노력”

임시회에서 도의회 의견 확정

충청북도의회가 4번째 추진되는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 만장일치 찬성 의견을 제시해 적극적인 통합추진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도의회는 주민화합 속에 청주·청원의 상생발전을 위한 성공적인 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 차질 없는 통합절차 추진과 함께 주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도의회는 지난 4월 30일 제309회 임시회를 열어 충북도가 제출한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의견을 확정했다.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도의회는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청주·청원 통합안에 찬성하고 양 지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통합의견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청주·청원은 생활권과 경제권이 동일하지만 행정구역이 분리돼 주민 불편과 행정효율 저하를 초래했다고 전제한 후 도넛형으로 분리된 행정구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통합함으로써 주민 편익과 행정효

율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의회는 청주·청원 통합은 주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통합의 기본원칙 아래 상생발전방안에 대한 합의가 완료된 지역주민 숙원사업이라며 5개 분야 39개 항 75개 사업에 대해 양 시·군이 합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지가 성숙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통합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양 시·군의 의견을 존중해 청주시·청원군이 결정한 대로 청주시는 「의회 의결」, 청원군은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적극 찬성했다. 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찬성을 결정했는데 이는 (제7대 : 반대) (제8대 : 찬성22, 반대 8)로 결정되었던것보다 진일보한 결과이다.

충북도는 도의회가 제시한 찬성의견과 함께 청주시와 시의회, 청원군과 군의회 의견을 첨부해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다.

도의회는 앞으로 통합절차가 신속하게 이행 될 수 있도록 의회의 책무를 다하고 통합의 당위성 홍보와 주민 참여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본회의 열어 찬성의견 의결키로 사전 협의

강한 통합의지 천명·추진동력 극대화

청주·청원 통합 추진을 뒷받침해 온 충청북도의의회가 최종 단계인 주민 의사결정을 앞두고 적극적인 통합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달 25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해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 찬성의견을 모았다. 이날 의원들은 도의회 의견제시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간담회에서도 도의회 의견을 정리할 수 있겠지만, 임시회를 소집해 본회의 의결로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간담회보다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통합에 대한 도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행정안전부에 잘 전달하는 것은 물론 통합 추진 동력을 극대화한다는 의미에서다.

또한 김형근 의장은 2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도의의회는 청주·청원 통합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형근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난 24일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와 시민협의회가 협의해 건의한 5개 분야 39개항, 75개 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상생발전 방안을 담은 통합추진 합의안에 도와 시·군단체장들이 서명해 진전되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65.3%, 반대가 27.8%로 찬성이 월등히 높게 나왔다며 이는 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근 의장은 그동안에도 청주청원 통합추진 공동협의회에 참석해 상생발전 방안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 등 통합추진을 뒷받침해 왔다.



▲ 4월 2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통합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나

청주시·청원군과 시·군의회,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의 의견이 확정됨에 따라 청주·청원통합은 청원군 주민투표로 최종 확정된다.

충북도는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6월30일 이내에 청원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가 실시되는데, 투표일은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요일(27일 또는 28일) 등을 감안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최소 투표율은 33.3%를 넘어야 하며 투표인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합이 확정된다.

주민투표 찬성의 경우 추진 일정을 보면 기존의 도지사, 시장, 군수 공동합의에 따라 올 연말까지 통합특별법을 제정하게 된다. 또한 특별법에 따라 2013년 통합출범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2014년 통합시가 출범하게 된다.

통합 협의회 상생발전방안

이번 통합 추진은 그동안 관주도로 진행했던 통합추진 실패 경험에 따라 민간이 주도하고 관이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청원군민협의회와 청주시민협의회가 구성돼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장, 군수가 수용한 것. 통합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양 시·군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했다. 통합추진협의회가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낸 협의안은 5개 분야 39개 항 75개 사업이다.

I. 기획행정분야 (12개 항) : △지방의회 운영, 통합시 및 구청 명칭선정 △현행 읍·면체제 및 기능 유지 △공정한 공무원 인사기준 마련 △통합 특별법 제정 △통합 합의사항 이행담보 조례제정 △통합협의 이행위원회 운영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구 재조정 △시정정책결정 관련 의결·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민간사회단체 운영 △청원·청주 재정 적정 안배 △기존 자매결연도시간 교류확대 및 유지

II. 농업개발분야 (6개 항) : △농·축사업 예산지원 △청원

생명브랜드 명품화 지속지원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농정국 설치 △농축산물 유통 및 로컬푸드 활성화 △친환경 농축산물 급식 유지 및 확대

III. 지역개발분야 (8개 항) : △군지역 위락단지 조성 △상하수도 요금 통합관리 △청원군 특성을 살린 도시기본계획 수립 △4개 권역별 기능분담을 통한 균형발전 △군지역 남부·북부 터미널 신설 △체육시설 군지역 이전 △통합시청 군지역 설치 △2개 구청 군지역 설치

IV. 산업경제분야 (6개 항) : △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환승시간 연장, 운행노선 개선 △인센티브 지원시 군지역 우선투자 △군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군지역 도로 우선 확충 △군지역 교통관련 불이익 방지 △군지역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

V. 복지환경분야 (7개 항) : △주민의사를 반영한 협오시설 입지 선정 △노인복지예산 지원 △복지재단 설립과 권역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보건지소·진료소 유지 및 기능 확대 △통합시 출범전 문화시설 공동사용 △체육행사 지속운영 및 선수 육성 △공공택지개발지역 군지역 주민 우선 청약권 부여

민선 5기 통합추진 과정

과거 3차례에 걸쳐 청주·청원 통합추진이 실패한 후 이에 대한 반성도 이어졌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청주·청원 통합을 공약한 후보들이 당선되면서 다시 추진됐다.

- 2010. 8. 11 = 지방선거 당시 청주·청원 통합을 공약한 민주당 소속 이시종 도지사과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가 통합추진 공동합의문에 서명. 주민참여형 통합추진, 통합시 모델제시를 위한 연구용역, 통합시 기반 조기 완료, 실현 가능한 사업 먼저 착수, 통합 인센티브 강화 등 5개항 합의
- 10. 11. 10 = 청주·청원 광역행정협의회 및 업무협약식. 공동추진협약 18개 사업 의결
- 11. 5. 3 = 청주·청원 통합 군민협의회 개소
- 11. 6. 1 = 청주·청원 교통행정분야 업무협약식.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 버스정보시스템 공동사용
- 11. 7. 22 = 청주·청원 광역행정협의회 개최. 공동협약추진

6개 사업 의결

- 11. 12. 27 = 청주·청원 광역행정협의회 개최. 공동협약추진 6개 사업 의결.
- 2012. 1. 19 = 통합에 관한 일정과 원칙 재천명. 통합의사결정은 2012년 6월중 결정. 청원군민협의회와 청주시민협의회간 협의조정된 내용은 시장·군수에게 건의하고 협의조정되지 못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별도 협의조정
- 12. 2. 9 = 청주·청원 통합 시민협의회 발대
- 12. 4. 19 = 제1차 청주·청원 군민·시민협의회 상생발전방안 협의결과 건의서 시장·군수에 전달. 39개항 75개 세부사업 협의결과 거건 협의, 4건은 시장·군수에 위임
- 12. 4. 19 = 청주·청원 통합추진협의회 개최. 39개항 75개 세부사업 협의 완료
- 12. 4. 24 = 상생발전방안 협의 완료에 따른 청주·청원 통합추진 서명. 청원군은 주민투표, 청주시는 지방의회 의결로 통합절차 진행. 통합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 노력 협조

“댐 특별법 제정·지원사업 확대가 과제”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댐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 4월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 도의원, 전문가 등을 초청해 「댐 주변지역 규제 및 지원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충청북도의회는 청주·청원 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을 투트랙 전략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가 바로 충주댐과 대청댐 주변지역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 방안이다.

댐 주변지역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권기수)는 지난 4월 17일 충청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 도의원,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댐 주변지역 규제 및 지원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도내 댐 주변 지역의 각종 규제완화 및 지원 방안, 친환경 개발 방안을 도출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촉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박홍운 교수는 ‘댐 주변지역 규제 및 지원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발표에서 “댐 주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지원사업의 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과제”라며

“대청호 개발은 규제의 범위 안에서 댐과 물을 활용할 수 있는 친수개발 방법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교수는 “우리의 물 관리 정책은 아직도 개발시대의 중앙집권적이고 획일화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며 “물과 댐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차원에서 이의 활용을 극대화 하는 것이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맹승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김동환 충북도의원, 김우중 충북도 문화관광환경국장, 박찬훈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이장, 장한성 청풍호사랑실천위원회 위원장, 이건희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사무처장, 엄재천 충북일보 정치부장, 김광렬 충북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댐 주변지역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사례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규제에 따른 후속 대처방안으로서의 지원책 마련 △규제가 완화됐을 때의 환경적 영향성 등에 대해 다각도의 토론을 벌였다.

도의회, 국립암센터 분원 건립 재추진 요구

백지화 부당성 지적하고 합리적인 입지 결정 촉구



▲ 충북도의회가 지난 3월 7일 '국립암센터 분원설치 백지화 규탄 및 재추진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오송 입지가 제시됐던 국립암센터 분원 건립에 대해 정부가 백지화를 발표한 가운데 충청북도의회가 이의 부당성을 성토하면서 분원건립 재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부터 세계 수준의 암 치료 기술 개발을 통한 보건의료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과 공공의료시스템 확충을 목표로 '연구 중심형 국립암센터 분원 설립'을 추진해 왔다.

정부 계획에 따라 충북도는 그동안 보건의료산업 발전과 지역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오송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오송에 분원건립 부지도 마련한 상태다. 그러나 대구가 뒤늦게 암센터 분원 유치에 나서 등 정치적인 상황이 변화됐다. 결국 정부는 용역결과를 근거로 삼아 분원 건립을 백지화 한 후 일산 본원을 증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보건복지

부가 오송에 분원을 건립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전면 배치된다.

충북은 지난해부터 정치적인 결정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면서 오송분원 입지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을 제시하고 분원 건립이 정치 논리에 휘둘러서는 안 된다고 점을 지적해 왔다. 도의회는 지난해 7월부터 충남북, 대전시의회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해 오송이 최적지임을 확인했다. 또 충북도, 지역정치권과 함께 암센터 분원의 오송 유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정부는 용역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지도 않는 엉뚱한 결과를 근거로 4년여 동안 추진해 온 분원 설립의 백지화를 발표해 충북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암센터 분원 백지화를 규탄하는 결의대회, 지역 기관단체 연대 활동, 암센터 방문 등의 활동을 벌여 온 도의회는 앞으로 계속 분원 재추진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결의대회·기관 방문·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

— 정부 암센터 백지화 발표 후 도의회의 대응

□ "강력 대처 천명 기자회견 (3월 2일)

도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립암센터 분원 백지화가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도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도의회의 국립암센터 관계관 방문과 도 관계자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오송이 분원 건립의 최적지임을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 분원 재추진 촉구 결의대회 (3월 7일)

도의회는 3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신관 앞에서 ‘국립암센터 분원설치 백지화 규탄 및 재추진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립암센터 분원설립 백지화 발표 즉각 철회와 객관적이고 투명한 용역을 재추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 시민단체와 연대투쟁 협의 (3월 13일)

도의회는 의장실에서 충청북도의회, 청주시의회, 청원군의회, 충청북도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충청북도협의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등 7개 기관·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국립암센터 백지화 철회와 오송 유치를 재추진을 위해 연대 투쟁하기로 협의했다.

□ 각 정당에 총선공약 포함 요구 (3월 15일)

충청북도의회, 청주시의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도내 각 정당을 방문해 암센터 분원 백지화에 대한 도민들의 분노와 우려를 전달하고 분원 재추진을 총선공약에 반영시켜 정당차원에서 힘과 지지를 보태 줄 것을 주문했다.

□ 국립암센터 방문해 재추진 촉구 (3월 22일)



▲ 3월 22일 국립암센터를 방문해 오송 유치의 타당성을 홍보하고 ‘국립암센터 분원 설립을 재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 3월 7일 도청 회의실에서 국립암센터 분원 백지화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북도의회 김형근 의장, 청주시의회 연철흠 의장,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송재봉 사무처장 등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 국립암센터를 방문해 이주혁 부속병원장을 면담하고 분원설립 재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 백지화 대응방안 대토론회 개최 (3월 27일)

도의회는 도청 대회의실에서 청주시의회와 청원군의회, 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청북도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충청북도협의회,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등 8개 기관·단체와 공동 주최로 ‘국립암센터 분원 백지화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회 내에서도 결의안·자유발언 통해 촉구

불순한 정치논리에 따른 분원 백지화 즉각 철회 충청권 무시한 수도권 집중화 정책 강력 규탄

대외적인 활동과 함께 도의회 내에서도 결의안 채택과 자유발언을 통해 오송분원 건립 재추진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3월 2일 열린 제307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권기수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국립암센터 분원설립 백지화 발표 철회와 조속한 재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는 불순한 정치논리에 따른 국립암센터 분원 설립 백지화 발표를 즉각 철회할 것과 분원 후보지역 타당성 검토에 대한 과업지시 내용을 무시한 채 분원건립 중지를 도출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용역결과 폐기, 객관적이고 투명한 용역을 조속히 재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158만 충북도민이 한마음으로 간절히 염원해 온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 유치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은 분원설립 백지화 발표에 대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넘

어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음을 밝히고 앞으로 도의회는 국립암센터 분원설립 백지화 발표가 철회되고 조속히 재추진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날 박문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권 무시와 수도권 집중화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책으로 국립암센터 분원설립을 조속히 재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 한다”고 성토했고, 임헌경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 문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분산 배치, 국립암센터 분원 위치에 있어 대구와의 치열한 각축전 등 불분명한 정부정책으로 우리 충북도민은 상처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는 지방균형발전과 충청북도의 침묵단지 완성, 그리고 충북도민의 염원을 감안해 국립암센터 분원 용역결과를 즉시 취소하고 재추진 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국립암센터 분원설립 백지화 철회 및 재추진 촉구 결의문

오늘 우리는 158만 충북도민이 한마음으로 간절히 염원해 온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 유치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은 보건복지부의 ‘분원설립 백지화’ 발표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넘어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오송분원 유치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분원 유치가 정치 논리에 휘둘러서는 안됨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용역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지도 않는 엉뚱한 결과를 근거로 4년여 동안 추진해온 분원 설립의 백지화를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함께 의료서비스의 수도권 집중화를 묵인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외시하려는 현 정부의 꿈수이며, 동시에 세종시 백지화, 충청권 과학벨트 공약 무효화 논란에 연이은 충청

인 500만을 무시하는 작태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정치논리에 치우친 결정으로 인해 더 이상 역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국립암센터 분원설립을 재추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불순한 정치논리에 따른 국립암센터 분원설립 백지화 발표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분원 후보지역 타당성 검토에 대한 과업지시 내용을 무시한 채 분원설립 중지를 도출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용역결과를 폐기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용역을 조속히 재추진 하라!

2012년 3월 2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청남대 개방 9주년... '봄꽃 향연' 만나다

야생화 전시회 · 문화예술공연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

청남대 개방 9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가 청남대 일원에서 열렸다.

지난 4월 21일 오후 7시 청남대 본관 정원에서 시작된 개방 9주년 기념행사는 특히 올해가 청남대 건립 30주년을 맞는 해여서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기념식은 IT국악밴드 공연과 팝핀 댄스공연, 청남대 홍보영상물 상영, 야간 경관조명 점등 퍼포먼스와 레이저쇼, 김중자 무용단 공연, 이호연 명창 민요 공연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에 앞서 사전행사로 제10회 청남대 울트라마라톤대회가 4월 14일 오후 3시 30분 청남대 헬기장에서 열렸다. 대청호반 100km를 일주한 이날 청남대 울트라마라톤대회에는 전국 울트라 매니아 700여명이 참가, 열띤 레이스를 펼쳤다.



▲ 청남대 개방 9주년을 맞아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열린 '봄꽃축제 영춘제'에 어린이들이 꽃 나들이를 나와 즐거워하고 있다.

'대통령 테마 관광지'로 도약 노력

이번 기간에는 평소 휴무였던 월요일도 개장하고, 매주 토요일에는 밤 9시까지 야간개장 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청남대 관계자는 "앞으로 청남대는 봄꽃축제를 계기로 대통령의 역사와 어울리는 다양한 공연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최할 계획"이라며 "청남대가 세계적인 '대통령 테마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봄꽃축제 영춘제' 행사의 백미

청남대 개방 9주년 행사로 '봄꽃축제 영춘제'도 열렸다.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펼쳐진 봄꽃축제 영춘제는 전시회와 체험행사, 문화예술공연, 청남대 개방 9주년 기념엽서 발행과 엽서쓰기 체험 등 행사가 진행됐다. 영춘제 기간에 벌어진 전시회에서

는 청남대에서 재배한 야생화 250여점을 전시하는 야생초 전시회와 대통령 골프체험, 전통민속공예체험, 숲체험, 봉황에 황금소원달기, 청남대 스텝 릴레이, 직지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어울림마당에서는 국악 공연, 교향악단 공연, 시립합창단 공연, 나누리 음악봉사단과 7080 가수 등이 참여한 작은음악회 등의 문화예술공연이 펼쳐졌다.



의회운영위원회

(제307·308회 임시회)

정례회 조정·결산검사위원 확정



▲ 3월 8일 김미림 이미지스피치 연구소장을 초청하여 '소통의 달인되기'란 주제로 직무연찬을 실시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문희)는 제307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를 열고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3월 2일 개최된 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는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1·2차 정례회를 매년 7월 10일과 11월 15일에 개최하던 것을 7월 1일과 11월 12일에 집회하기로 했으며,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3월 12일 실시한 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3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4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도정 및 지방교육행정 분야에 대한 질문과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제308회 임시회 중에도 두차례 운영위원회를

열어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4월 16일 개최된 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 대해 심의하여 원안가결 했다.

선임 협의된 위원은 충청북도의회 의원 2명(권기수, 김영주), 공인회계사 2명(송창근, 임상혁), 세무사 2명(임상혁, 박광석), 유경험자 2명(김대옥, 김장한)으로 모두 8명이다. 위원들은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금고의 결산 내용에 대해 충청북도 교육청은 5월 23일부터 30일까지, 충청북도는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총 20일간 검사를 한다.

4월 25일 열린 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30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5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도정 및 지방교육행정 분야에 대한 질문과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제307·308회 임시회)

보육 조례 개정·보육정책 개선 촉구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심기보)는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영유아 무상보육 정부지원 확대 및 정책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4명) 위촉 조항을 삭제하여 보육전문가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했다. 또 위원의 제척·기피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5명인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 위원 수를 7명으로 늘려 전체 위원 수를 11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재산등록 심사 등 공직 관련 안건의 엄격한 심사와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했다.

이와함께 「영유아 무상보육 정부지원 확대 및 정책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본회의 의결 후 청와대, 보건

복지부, 국회 등 주요 기관에 건의했다.

제308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험결과와 광고 등 금지 규정을 완화하여 열린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험 중별에 따른 처리기간과 검체소요량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시험·검사 절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것. 또 일부 행정용어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정비하거나 순화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상 의미가 적합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변경해 수정 가결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를 방문해 자치감사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으며 5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찾아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탁 및 목공예 작업장 등을 견학했다.



▲ 4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자활 작업장 운영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307·308회 임시회)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기틀 마련



▲ 4월 17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해 보은군 마로면에 조성한 공장용지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병운)는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먼저 금년 3월 충주시 문화동에서 안림동으로 이전예정인 충주의료원 현 부지 및 건물 매각과 관련하여 현지를 방문한 행정문화위원들은 현황을 보고받고 재산 활용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후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의결했다. 또한 박종성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충청북도가 발주하는 3억원 이상의 공사, 학술용역을 제외한 1억원 이상의 용역에 대하여 사업자의 책무와 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대가의 직접 지급, 신고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충청북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체불이 없도록 하여 근로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충청북도의회의 굳은 의지를 담은 뜻깊은 조례로서 원안의결했다.

또한 제308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충청북도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 대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로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와 장애인·노인·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취사·청소·세탁 등 가사 서비스 등이다. 또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사업과 주거환경개선, 생활자립 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이어 관광진흥법 및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관련 고시에 맞도록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운영 사항을 관광진흥 지원조례에 삽입하여 2건의 조례를 통합하는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의결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제307·308회 임시회)

농업경쟁력 강화 위한 소통의정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봉희)는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통상국·농정국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주요현안 사업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육포정클러스터에 대한 현지방문을 실시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3월 5일 실시한 경제통상국, 농정국과의 간담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시·군의 조례 개정 추진 사항과 낙후지역 투자기업 특별지원, 발농업 직접지불 사업, 백두대간 이화령 복원사업 등의 주요 현안사업을 청취하고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제정과 예산 지원 요구에 적극 협조할 것과 함께 철저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농어촌공사에 대한 현지방문에서는 관계자들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현황을 청취한 후 시설을 점검했다. 파악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3월 12일에는 육포정클러스터를 방문해 육우

판매 현황 및 애로사항을 듣고 FTA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입소고기와 차별화하는 등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제308회 임시회 기간 중 농정국, 농업기술원과 「충청북도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을 심사·의결했다.

4월 17일에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농업분야 중북·유사 사업에 대한 효율적 추진방안을 모색했고, 특히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평가환류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 했다.

이어 18일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를 하여 모두 원안가결했다. 또한 옥전에 위치한 「향수한우판매타운」을 방문하여 경영방식, 마케팅 전략 등 운영사항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고 한우소비 증가를 위해 더욱 애써 줄 것을 당부했다.



▲ 3월 5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점검 및 관리방안과 연구를 위해 청원군 미원면 화원리 신흥소류지와 가덕면 수곡리 수곡소류지를 방문해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건설소방위원회

(제307·308회 임시회)

암센터 오송분원 재추진 강력 촉구



▲ 3월 6일 영동군 황간면에 조성중인 공동집배송센터, 물류터미널, 창고 등의 지원시설인 황간물류단지를 방문해 경쟁력 있고 미래지향적인 물류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권기수)는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 국립암센터 오송분원설치에 따른 결의문을 채택하고 자체연찬회와 도정질문,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3월 2일 채택한 이번 결의문은 정부의 국립암센터 분원건립 백지화 발표에 따른 것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시·군의회,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옥천공용버스정류소와 영동향간물류단지조성사업장에 대한 현지방문에서는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꼼꼼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또 도민들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이해 및 활용방법」에 대한 자체연찬회를 개최해 의정역량 강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현안사업에 대한 간담회에서는 2단계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과 관련해 전 시·군이 균형 발전될 수 있는 사업추진을 당부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다짐했다.

4월 16일부터 25까지 실시된 제308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소방본부소관 조례개정안을 심사 의결하고 관련부서와 간담회를 실시해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4월 17일은 ‘댐 주변지역 규제 및 지원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자연자원의 보전과 지원사업 확대, 지원비율 상향 조정방안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가감 없이 수렴해 충북도에 시책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청댐 유역 종합발전계획의 강력한 추진과 댐지역 발전과 수질보전을 위한 3개 사업 제안, 지역의용소방대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추진 촉구, 오송첨복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지역정치권의 결속과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국립노화연구원 유치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도정현안인 기상관측클러스터 업무협약,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교육위원회

(제307·308회 임시회)

「농·산촌 작은학교 지원」 공청회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미애)는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보고회와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3월 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보고회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연계 체제 구축 등의 작은학교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3월 5일부터 6일까지 제주교육수련원 설립 예정부지와 탐라교육원 현지를 방문해 현황과 추진 상황을 파악 하고 3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아울러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개정

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계획안」은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했다.

제308회 임시회에서는 4월 17일 박상필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병학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지난 3월 회기에 의결을 보류했던 「충청북도 제주교육수련원 설립계획안」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으로부터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 연구결과와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 82개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원안대로 가결했다.

아울러 4월 24일 「충청북도 농·산촌 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앞서 관련 분야 전문가와 교육계 및 지자체 담당자, 학부모 등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 4월 24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농·산촌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전문가, 학부모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장중심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3782(2011. 10. 28)호로 지방 자치단체 표준 조례안이 통보되어 상위 법령에 맞게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이광진 의원)

- 조례명칭 변경 및 조례를 알기 쉽게 정비
-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로 변경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광수 의원)

-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최근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따라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2007년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를 제정 하였으나 동 조례의 설치근거 법조항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의 규정이 삭제(법률 제9843호,2009.12.29) 되어 모법에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표발의 : 김영주 의원)

- 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는 체력측정을 통한 운동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도민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1999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었으나, 수탁기관인 충청학원으로부터 위탁운영기간 만료('11.12.31)에 따른 협약해지를 요청 등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우리도 소유의 충주의료원이 문화동에서 안림동으로 이전을 위한 신축 공사가 2012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사용 중인 의료원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을 활용 등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대표발의 : 박종성 의원)

- 충청북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출자:충청북도교육감)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유아교육법」 제6조에 의거 유아교육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고, 그 설치 목적과 분장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이수완 의원)

- 조례명칭 변경 및 임원에 관한 사항 개정
-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 진흥재단'을 '오송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으로 법인명칭 변경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김동환 의원)

- 충청북도 지역균형 발전 협의회 폐지
- 충청북도 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충청북도교육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주요처리 의안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제안자 : 행정문화위원장)

- 충청북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충청북도의 한부모가족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행정용어 순화 및 금지 규정 완화와 중복 문구 등의 정리로 긍정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고 「시험종별에 따른 처리 기간과 검체소요량」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전문적인 시험·검사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양희 의원)

- 2000년 제정·운영되고 있는「충청북도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지역의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로 통·폐합하여 입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 등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정지숙 의원)

- 관광진흥법령,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에 고시”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박상필 의원)

- 조례의 목적과 특별장학생 요건 간에 불일치한 부분과 특별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확대 및 공정성 측면에서 일부 한계가 있어 특별장학생 선정 요건을 확대하고 선발심의 과정 체계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공장입지가 불리한 지역에 유망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조성한 공장용지를 우리 도가 유치하는 업체에게 매각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미술장식품 업무가 시군에서 시도로 이관되어 이를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사항 개선·보완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윤성욱 의원)

-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함으로써 재단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명시함은 물론 기본재산의 조성 등 관련 조례안을 체계화함으로써 조례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신고포상금을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지급하여 도민 소방안전망 확보에 기여
- 보상을 현금외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지급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정현 의원)

- 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운용 중인 조례를 공공기관 유치 시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상위법령의 개정과 지식경제부 고시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황규철 의원)

- 2001년 제정되어 운영중인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현재 추진하고 고 주요 업무, 기본재산 구성 등 조문을 체계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 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방안 권고사항과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장병학 의원)

- 안전한 학교 및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 학교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코자 함.

충청북도 제주교육수련원 설립 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학생 수학여행, 전지훈련, 현장체험활동 등의 수용시설 제공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 교직원 연수 등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복지시설 제공으로 교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을 설립하고자 함



5분 자유발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장병학 의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및 대처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사들은 학생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학생들과 눈높이를 같이하면서 따뜻한 가슴으로 도움을 줘야 합니다. 둘째, 학교마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셋째, 학부모는 밥상머리 교육을 통한 자녀와의 대화시간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넷째, 학교폭력은 작고 큰데 학교나 117에 반드시 신고함을 의

무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을 존중하는 학교풍토 조성이 중요합니다.

옛날처럼 지역사회에서 스승님을 예우하는 풍토를 마련해준다면 학교폭력 근절은 물론, 사람다운 사람을 키워내는 교육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충북교육은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위해 앞차고, 안정된 학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에서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폭력 학생을 선도, 상담, 심리 치료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을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진정한 학교폭력을 근절시키려면, 실추된 교권을 살려 안정된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158만 도민 모두의 교육적 관심과 사랑, 재정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대청호유역 발전방안 시급”



김재종 의원

본 의원은 「대청호 유역 친환경 공동발전 방안 추진」에 대하여 당부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청댐 건설 후 30년이 지난 지금도 청원, 보은, 옥천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기타 법령에 의한 2중, 3중의 규제에 묶여 지역 주민의 불편과 고초는 더 말할 가

치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토와 재산을 제 맘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가 하면 중앙정부 지원도 제대로 받지못해 그간의 경제적 손실이 8~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는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째, 충청북도와 청원, 보은, 옥천군이 공동으로 수립중인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 방안」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둘째, 대청호 생태보전과 수질오염예방을 위한 「인공수초 재배설 설치 사업」을 확대 시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에서 안남면 지수나루터까지 15km에 가칭 「금강 레프팅장 설치」를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린 당부와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댐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도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기부로 학생들에게 꿈을”



박상필 의원

최근 교육계에서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교육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업이 당장의 이윤 추구에만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인재를 기르는데 교육기부로 참여한다면, 어려서부터 그러한 기업에 애정을 갖고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로 자라고 기업

은 그러한 인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 교육 현장에 많은 대기업들이 교육기부 활동에 참여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대학연구소사회단체도 교육기관과 다양한 MOU체결을 통하여 교육자원을 제공하고 있고, 개인들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 재능 기부를 통하여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주5일제 수업이 전면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토요일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적·물적 자원 확보 및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교육기부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교육기부 활성화와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가장 좋은 적기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도에서 교육기부가 지역의 인재육성과 교육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교육기부 운동 전개에 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소방 사각지대 해소 대책 필요”



권기수 의원

소방행정의 효율적인 임무수행이라는 명분과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면단위 119지역대를 통폐합함에 따라 도내에는 49개 면지역에 소방공무원과 소방차, 119구급차가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소방대책이 전무한 49개 면지역 중 13개 면지역은 초동화재 진압을 위하여 전담의용소방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전담의용소방대를 만들기 위하여 면단위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1톤 경량소방차 배치,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강화, 비상 소방용수 시설 확보, 전담의용소방대 인센티브 부여 등을 지원하겠다고 지침을 시달하여 면에서는 先전담의용소방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 대책이 미 이행되어 근무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 감사 때 소방공무원의 3교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서면보고를 하겠다고 이시종 지사께서 답변하셨는데 혹시 소방공무원의 3교대 근무를 위해 면단위 119지역대를 무리하게 통폐합시킨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소방공무원 맞교대 근무도 중요하지만 도내 49개 면의 소방행정 사각지대가 발생된 것도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사각지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실시하는 전담 의용소방대도 제대로 지원해 화재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청호 유람선은 대안 아니다”



이광희 의원

최근 대청호 유역의 개발을 통해 규제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 및 생활권을 회복시키겠다는 취지하에 「대청호유역 친환경 공동발전방향」을 추진하고 그 결과물로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대청호 친환경 옛 뱃길 도선운항 조성의 타당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수행된 용역 검토결과 비용편익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으며, 미래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급조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말이 도선운항이지 실상은 유람선을 띄우고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해 보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첫째, 유람선 운항은 현행 법률에 비추어 볼 때 실행 불가능한 발상입니다.

둘째, 현재 대청호의 수질은 COD 기준 평균 3.12ppm, II등급으로 결코 양호한 상태가 아닙니다.

셋째, 유람선 운항에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람선 운항은 대청호 상류 주민들과 하류주민들이 서로 인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일 수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갈등이 다소 있더라도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하면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환경을 보존하면서 대청호 유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북도가 다시 대안마련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암센터분원 재추진 이행돼야”



임현경 의원

저는 오늘 충북의 미래를 담보할 오송첨단의료 복합단지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과 정치권의 초당적인 결집을 촉구하고자 성공적인 오송첨단의료의 완성을 위하여 몇 가지 현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립암센터 분원과 관련해, 오세세, 노영민, 변재일 국회의원은 4.11 총선을 통해 국립암센터 오송분원 재추진을 공약한 바, 국회의원 당선자 모두는 충북도민과 약속한 국립암센터 오송분원 재추진 공약사항을 초당적으로 협

력하여 반드시 재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현재 담보상태인 첨단임상시험센터는 각 섹터(sector)간의 유기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충청북도는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충북대병원 등 민간 임상시험병원의 유지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며 첨단임상시험센터의 용지분양도 서둘러 진행하여야 합니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줄기세포연구센터와 국립노화연구원을 당초 발표한 대로 오송에 입지를 지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으로, 현행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는 첨단지 총괄권을 총리실로 상향 이관하여 부서간 조정능력을 높이고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총괄권 이관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307회 임시회
도정질문 · 답변



김양희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본회의장 이석 관련

[질문] 지난해 12월 16일 제3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시 본회의장 이석한 이유와 자당의원 출판기념회와 본회의 중 무엇이 우선입니까?

[답변] 우리 관내 주요인사의 출판기념회에 축사가 있어 늦게나마 참석하고자 이석하게 됐고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시정연설, 예산과 안건 의결을 마치고 마지막 자유발언시간에 양해를 구해 이석했습니다.

[질문] 1월 10일 본회의에는 의원들에게 알리지도, 추후 양해공지도 없이 왜 본회의장을 이석했습니까?

[답변] 의장단에게 사전 양해가 되어 이석했습니다.

도지사 취임 이후 인사 관련

[질문] 도지사 취임 이후 행해진 코드인사, 측근인사, 오기인사와 관련해 취임 이후 각종 코드인사로 비판받은 거 기억하시지요?

[답변] 일부에서 코드인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어느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지사께서 본 의원에게 보낸 답변 요지에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문화 정착을 기본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사께서 추구한 인사 원칙 맞습니까?

[답변] 능력과 또 열의를 기본적으로 하면서 연공서열도 같이 고려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대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답변] 우리 도의 국장급들 인사를 보면 다 열심히 일을 해서 국장급에 승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 이번엔 청소년종합지원센터장 임용에 공모한 두 명 가운데 적임자를 제쳐두고 코드에 맞는 인물을 임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도지사는 공모해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도지사가 일반 공무원처럼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면접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사항으로 그것은 심사위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질문] 화엄아동센터 이 원장은 자격기준에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실무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됩니다. 실무는 상근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으로 최저임금이 90만원인데 월 60만 원을 받고 상근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상근 여부는 임금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상근 여부는 청주시장으로부터 3년 1개월 동안 상근했다는 확인서를 공식적으로 받아서 상근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NGO 센터·양서류 생태관 사업 적정성

[질문] 지사께서는 NGO센터에 도민들이 동의한다고 보십니까?

[답변] NGO센터 건립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예산을 책정했으며 그 예산을 의회에 상정해 김양희 의원님 포함한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정식으로 승인을 해주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양서류 생태관 중 85억이 지방비입니다. 이 돈이 있으면 어려운 경제와 서민들에게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국정감사 때 권장했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국비지원을 받지 못한 사항이라 현재 가부 여부는 실익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의 정치 개입 관련

[질문] 정치 개입과 관련해 민주당 최영일 후보와 홍재형 예비후보의 북부터미널 용역에 관한 사항은 시기적으로 너무 미묘하다고 생각하며, 북부터미널은 8년 전에 홍재형 예비후보가 공약했다가 지금 빌 ‘공’ 자 공약이 돼버린 도민들의 큰 불만거리 중의 하나인데 왜 도가 개입을 하십니까?

[답변] 정치개입은 한 적이 없고 개입 할 의사도 없으며, 북부터미널 용역은 청주시에서 충북도에 요구를 했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용역의뢰를 한 것입니다.



김동환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댐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 규제 및 피해

[질문] 댐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조사 시점과 조사항목, 조사결과, 그리고 피해대책을 위하여 도에서 취한 조치 및 중앙부처와 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변] 충주댐·충주 조정지댐은 2007년 11월에 강원, 경북, 충북 3개도 공동으로 '댐 주변지역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연구'용역을 통하여 2006년도 말 기준으로 피해를 조사했으며, 2008년 12월 26일 완료했고 법제연구용역에 대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관련부처 합동용역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에 법률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질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 사업비가 지급된 대상지역 및 지원규모 등이 적정하게 책정되었습니까?

[답변]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청원·보은·옥천군으로 주요 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 주민생활 지원사업 등이며, 최근 5년간 지원규모는 충주댐 355억원, 대청댐 165억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지원사업비 적정성 및 공고여부

[질문]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여부 및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과의 대비 및 이에 대한 개선의견과 추진경과, 유사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결과는 무엇입니까?

[답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지원되며,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과의 단순비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8년도에 이시종 지사님과 송광호 의원께서 발전판매 수입금의 지원기준 상향조정과 지원사업범위 확대를 개정 건의했고, 전국 시·도의회의장단에서도 법 개정을 건의 중이며, 전국 18개 댐 소재지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2011년도에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구성하고 댐 주변지역의 직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공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댐주변 규제 완화 시 환경오염대책

[질문] 댐주변 규제현황과 규제가 완화될 경우 환경오염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충주댐 하류지역의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본 댐 하류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 1,645km²와 조정지댐 하류에는 수변구역 20,56km², 대청댐 내에는 두 개의 취수탑으로 인한 상수원 보호구역 178,999km², 특별대책지역 700,2km², 수변지역 190,202km²가 지정되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다목적댐에 의한 댐 주변 지역의 규제완화를 위한 중앙부처와의 협의내용은 무엇입니까?

[답변] 2007년부터 현재까지 환경부장관 면담을 비롯해 27회에 걸쳐 다각적으로 규제 완화를 건의 중입니다. 대청호 유역에는 2011년도 청원, 보은, 옥천 3개 군과 공동으로 친환경 공동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해 2011년 12월에 옛 뱃길 도선운항과 친수공간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법령 개정 등 정책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댐 주변지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답변] 친환경 도선운항은 지역 주민들의 편의 제공과 대청호 주변 방문객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친환경 숙박시설 가족 휴양시설 등의 조성을 통해 그동안 침체되었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 도내 환경관련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댐 주변지역 규제완화로 인한 환경변화 및 환경오염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현재 도선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도선운항에 따른 수질오염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하수관거를 통해 대청호 유역 밖으로 전량 이송 처리할 계획입니다.



제308회 임시회

도정질문·답변



이광진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고용감소·저출산 대책

[질문]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그 동안의 주요시책과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양육비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율이 쉽게 개선되고 있지 않으므로, 각종 지원금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3자녀가구에 대한 출산지원금 및 기타 지원혜택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국비 등의 추가지원이 없는 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질문] 저출산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과 도 차원의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출산친화적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저출산 해소 및 고용안정성 증대를 위한 충북도의 추진실적은 무엇입니까?

[답변] 2011년도에 41개 기업체가 참여한 CEO포럼을 구성, 기업체 인사담당자 포럼 등 기업체를 대상으로 출산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요청할 계획입니다.

[질문] 고용불안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충북도의 성과는 무엇입니까?

[답변] 2014년까지 25만1천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청년일자리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년인턴사업 지원, 대학생 우량기업 취업지원 상생협약 시책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무상보육정책에 따른 재원마련대책 및 중장기계획은 무엇입니까?

[답변] 지방 재정운용상황이 열악하므로 전액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전철 노선 변경사유

[질문] 혁신도시 연결 수도권전철 중부선 구축계획 변경을 음성군에 통보하지 않은 이유와 사전에 의견수렴을 하였습니까?

[답변]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구체적 설명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공청회 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동탄노선을 도 종합계획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노선변경을 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답변] 충북 내륙지역 개발을 촉진하여 중부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질문] 수도권전철 중부선 구축계획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답변]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시 감곡-혁신도시-증평-청주공항노선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수 감소에 대한 대책

[질문] 도내 농산촌 지역의 저출산 문제와 초등학교 감소문제에 대해 최근 5년간 도교육청에서 연구하거나 실태 분석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변] '학령인구 감소의 교육부문 예측과 관련정책의 연계 통합방안'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관리자 및 교원연수'를 통해 문제인식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도내 초등학생수 감소 방지를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시책과 지원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답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출산장려를 위한 학부모교육을 확대하겠으며, 학교 및 지역교육청을 통해 출산장려에 대한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청주·청원 통합 관련 기자회견**

4월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활한 청주·청원 통합을 위해 충청북도 의회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암센터 분원 공약 반영 요청**

충청북도의회는 지방의회, 시민사회 단체 대표와 도내 각 정당을 방문해 국립암센터 분원 재추진 및 오송유치 공약사항으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 **암센터 관련 기관단체 간담회**

충청북도의회는 3월 13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도내 기관·사회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국립암센터 오송 분원 사수에 함께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 **충청북도 제주수련원 설립 예정지 방문**

교육위원회는 3월 5일 제주도 동에 있는 '충청북도제 주수련원' 설립 예정지를 방문해 관계관으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 **제주교육수련원 관련보고**

교육위원회는 3월 12일 제주교육수련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 **선수단 격려**

행정문화위원회는 3월 4일 충주시 호암체육관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 및 제11회 전국실내조정선수권대회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 **옥천공용버스정류소 신축 현장 방문**

건설소방위원회는 3월 6일 옥천공용버스정류소 신축 사업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 했다.



◀ **정책복지위원회 직무연찬**
정책복지위원회는 4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해 독립성 보장 등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건설소방위원회 연찬회**
건설소방위원회는 3월 5일 의원역량 강화하고 소통전략을 습득하기 위해 KT 홍보실 강사 2명을 초빙하여 'SNS 이해 및 활용방법'에 대한 연찬회를 실시했다.



▲ **전체의원 연찬회**
3월 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발전연구원 원광희 실장을 초빙하여 '충청북도 발전정책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전체의원 연찬회를 실시했다.



▲ **전국시도의장협의회 개최**
충청북도의회는 3월 21일 오전 11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2년도 제 3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청주·청원 통합 마지막 기회 우리지역 경쟁력 강화 위해 결단해야

장선배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이번에는 과연 청주·청원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까?

4번째 시도되는 청주·청원 통합추진. 그 기대감도 크지만 확신에는 이르지 못한 현재 상황을 말해주는 질문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통합을 장담하지 못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조건과 분위기가 성숙돼 있고, 이번에 못하면 다시는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세 차례의 통합시도는 관 주도 추진해 주민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기득권 상실을 우려한 일부 세력의 반대로 좌절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명 다르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을 공약한 민주당 소속 이시종 도지사 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가 일관되게 상생발전을 전제로 한 통합 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 과거 관 주도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민간기구를 만들어 주민들이 중심이 된 통합을 추진했다. 민간기구인 청원군·청주시 주민·시민협의회는 그동안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계속한 끝에 마침내 5개 분야 39개 항 75개 사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청주시·청원군의회도 통합추진을 뒷받침하고 있다. 충청도의회는 4월30일 임시회를 열어 적극적인 찬성의견을 제시하고 주민 참여 확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청원군이 4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통합 찬성의견이 65.3%로 반대 27.8%보다 높다.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양호하다고 통합이 성

사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6월말 청원군 주민투표에서 최소 투표율 33.3% 이상에 주민 찬성도 과반이 넘어야 한다.

통합에 대해 일부 청원군 주민들은 아직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반대 이유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청주·청원이 통합을 통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상생발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청주·청원은 동일한 역사성과 주민들의 생활권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통합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통합이 미래 우리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제 세계는 국가 간 경쟁에서 세계 도시 간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 도시 간 경쟁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통합은 앞으로 우리지역이 생존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통합을 통해 농촌과 도시가 기능을 보완하면서 발전의 가속도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지역은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발전 중심축에서 소외돼 왔다. 미래에도 우리지역이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50년, 100년, 더 앞의 미래를 내다보며 청주·청원 통합을 결단하고 함께 참여해야 한다.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



최미애 의원(교육위원회)

이제 한 달 만 지나면 제9대 의회 전반기 2년이 끝난다. 정말 눈 깜박할 새 지나갔다.

사실 어찌나 바쁜지 “어! 벌써 토요일인가?” 하고 놀라는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제9대 의회 들어와서 교육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내가 교육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 네 분 교육위원님들은 물론이려니와 교육계에서도 불만이 많았다. 교육전문가를 제치고 비전문가가 교육위원장이 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심지어 다수의석을 점유했던 민주당이 교육계를 경시한다는 주장까지 있었지만 아무튼 나는 우려와 비난을 무릅쓰고 교육위원장이 되었다.

나는 사실 교육에 대해 문외한이 아니다. 중학교에서 10 여 년 간 교직에 복무했으며 교육관련 시민단체 활동과 지난 제8대 의회 4년을 교사위원회에서 활동한 것 까지 전문성으로 말하자면 적지 않은 경력을 쌓았다.

의정활동은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관과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올바른 신념과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의원역할은 한마디로 모니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즉 정책 수혜자인 시민에게 집행부가 현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시민이 정책에 대해 만족하는지를 파고들면 전문성은 자연히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저녁 청원군 M여중학교 학생투신사건에 대한 뉴스를 보았다. 머리가 무거웠다.

어린 학생들이 한없이 가엽다는 생각을 한다.

이럴 때 나는 갑자기 불안해진다.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긴 한 건가? 반문하기 시작한다. 하소연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전화한다. 경쟁과 학력 위주 입시위주교육, 바뀌지 않는 관료사회에 대해 욕을 한다. 저쪽에서 말한다. “그걸 바꾸라고 의원 뽑아준 거 아냐?” 할 말이 없어진다.

진보적 시민단체에서 일한 경력에다 교육감과는 교육관이 전혀 다른 내가 사사건건 충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언론은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갈등을 증폭시키고 비난을 일삼았다. 당당한 척 했지만 위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할 막강한 힘을 지녔음에도 제대로 견인해 내지 못한 것은 누구 탓이 되었든 잘 못한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중장기 과제로 추진했던 「작은학교지원에 관한 조례」를 완성 했으며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 과도한 교과학습위주 방과 후 활동을 특기적성으로 전환하게 하고 기초학력미달학생의 과도한 중복 프로그램 축소 등을 견인해 냈다. 장애학생 교육권확보를 위한 대타협도 이뤄졌다. 또 과도한 불용예산과 예비비 과다채정 등도 상당부분 시정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집행부의 결정적인 잘못을 눈치 채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초조하다. “남은 2년은 더욱 내실 있게!!!!” 라고 다짐해 본다.



“충청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 인터넷생중계 : <http://assemtv.cb21.net>

● 트위터 : <http://twitter.com/#!/chungbuk/assem>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cbassembly>

청원안내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날인),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제출사항

-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표지
-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구제 요구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 처벌 요구
- 조례, 규칙 제·개정 등 자치단체 소관업무 등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220-5151~5155

민원안내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서는 청원서 외에 진정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의견서 등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민원제출방법

- 우편민원 :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68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assem.cb21.net>의 「도민발언대」에 글쓰기
- 전 화 : 043) 220-5151
- 팩 스 : 043) 220-5159

방청안내

■ 방청권 교부

- 방청권은 의회사무처에서 교부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 방청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준수

■ 방청권 신청

- 의사담당관실 : 043) 220-5155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